

大學設立은 自由化되어야

尹 鍾 健
(韓國外大 師範大)

1. 緒

참 답답하고 안쓰러운 일이다. 해마다 12월이면 온 나라가 몸살을 앓는다. 大學入試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3분의 2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그중 3분의 2가 탈락하는 비정한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누구더러 돈 대달라고 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 내 돈으로 공부하겠다는 데도 정부가 강제로 막아야 하는 모순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그것도 실력이 달려 도저히 大學敎育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없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라면 할 말이 없다. 이도 저도 아니고 단순히 고등 실업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고등 인력을 양산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라는 이유에서이다. 또 더러는 선진국보다도 오히려 고등교육

인구가 많다거나, 가까운 이웃 나라들도 입시 지옥을 당연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그 정도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는 엉뚱한 논리를 펴기도 한다.

사실 현재 우리는 대학 입시 못지않게 대학 졸업자의 就業 문제가 골치 아픈 과제가 되고 있다. 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석·박사도 취업을 못해 아우성이다. 그런가 하면 또다른 한편으로는 이·공 계열이 人力難에 허덕이면서 대학 정원을 빨리 늘려야 한다고 야단이며, 생산직도 인력난으로 생산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의 문호를 완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다른 이는 대학의 문호를 지금보다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필자의 입장은 전자에 속한다. 즉, 대학의 門戶를 완전 開放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는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 주

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대학의 수가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 따라서 大學設立의 自由化는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 입장이다. 이제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밝혀 보고자 한다.

2. 大學門戶의 完全開放을 주장하는 이유

우리나라 사람들의 敎育熱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그것을 이른바 오도된 敎育열이라 하여 하나의 병폐로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 學力보다 學歷을 중시하며, 敎育을 단순히 출세 또는 계층 이동의 수단이나 장식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쓸 데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대학에 가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

학의 문이 좁아지고 있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대학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개방되어야 하며, 대학 입학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꼭 대학에 가야 하는 사람들인가? 대학 입학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학이란 고도의 전문이론이나 학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컨대 의사나 법관, 교육자, 학자, 사회의 지도층, 첨단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고급 관리나 기업체의 간부 등등은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일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하급직 공무원 또는 말단 회사원, 노동자나 농민, 일반 장사꾼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하므로 그들이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오히려 시간적·경제적 낭비에 속하며,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막대한 손실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더라도 엄격하게 대학 인구를 수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핏 들으면 그럴 듯하지만, 사실은 커다란 모순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미 변하고 있는 大學의 意味와 目的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은 소수 엘리트들을 위한 기관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대학은 심오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었으며, 사회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

러나 오늘의 대학은 그 이념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 즉, 대학은 대중교육 기관이며 심오한 학문을 연마하는 고등교육 기관이 아니라 보통 수준의 교육에서 한 단계 앞선 高等普通教育을 하는 후기 중등학교(postsecondary school)로 간주되고 있다. 더이상 대학은 상아탑도 아니며, 소수 엘리트 집단만을 위한 학문의 전당도 아니다. 대학은 사회와의 높은 담을 완전히 허물었으며, 만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平生教育機關의 하나일 따름이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라도 大學教育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과정도 전문교육보다는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대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목적도 다양하다. 이처럼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학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바 다기능 종합대학(multiversity) 또는 지역사회대학(communiversity)으로서의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경제기획원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겠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인격과 교양을 쌓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물론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있고 그밖의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더이상 대학을 출세의 수

단으로 생각하거나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사회 지도층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양과 인격을 쌓기 위해서 대학을 가겠다는데 대학의 문호를 굳이 통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식자들은 대학을 아직도 쓸모없는 고등 실업자들을 양산하는 기관으로 보려는 비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대학 입학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자녀만은 기를 쓰고 대학교육을 받게 하려고 한다.

저들 말하거니와 대학은 더 이상 상아탑도 아니며 직업 준비 교육 기관도 아니다. 그리고 대학은 소수 특권층이나 엘리트 집단만을 위한 사회 지도자 양성 기관도 아니다. 대학은 大衆教育 기관이며, 교양과 인격 함양을 제일의 목적으로 한다. 대학은 누구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개방되어야 하며, 성별이나 사회적 계층이나 지역 또는 출신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농사를 짓거나 손에 기름을 묻히면 왜 안 되는가? 대학을 졸업하고 포장마차를 하고 택시 운전을 하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 인력 낭비라는 논리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반대로 기업체의 고급 간부나 고급 공무원 또는 이른바 사회 지도층은 꼭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한 것인가? 과거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무엇이든지 될 수

있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야당 증제가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영국 수상도 고등학교 중퇴라고 알려져 있다. 도대체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나 될까? 특정 직업이나 특정 사례를 들어 대학교육을 평가하고 대학 통재론을 펼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대학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첫번째 이유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그만큼 더 배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사회 및 국가적으로 어느 면에서건 결코 손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학을 나온 사람은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보다는 인격과 교양 면에서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의미로는 교육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된다. 그러나 한편 대학을 못간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논리로 비약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대학교육은 그만큼 쓸모가 있음을 강조하자는 뜻이다.

두번째 이유는 대학은 대중교육 기관으로 보편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되어야 할 기본권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미국의 주립대학들은 그 주의 주민들이 입학할 원하면 모두 입학시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학교육을 의무교육화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는 것이다. 알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세번째 이유는 대학 졸업자를 선호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며, 나아가 앞으로는 더욱 그러한 추세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온 국민이 바라고 선호하는 대학교육을 억지로 막으려 함은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유일한 선택이다.

3. 大學設立 自由化를 주장하는 이유

대학이 누구나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되려던 대학의 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 '91학년도 대학 입시만 하더라도 입학 지원자의 3분의 2가 탈락했다. 이는 정부가 대학 정원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고, 기존의 대학들은 더이상 수용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대개의 대학들이 증원을 희망하고 있으며 학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시설을 비롯한 각종 수용 태세를 갖추어 나가면 되겠으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현재도 대학 설립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없는 일이다. 따라서 보다 능력 있고 의지도 있는 대학 설립 희망자들에게 대학 설립을 자유화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대학이라지만, 그 종류는 다양하다. 전문대학, 단

과대학, 종합대학, 개방대학, 방송통신대학, 재결체 대학, 야간대학, 초급대학 등등이 모두 우리가 대학이라고 통칭하는 것이다. 이 대학들은 자기 그 성질과 특성이 다르며 목적도 다르다. 그리고 모두 필요한 재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大學의 門戶를 開放하고 그 設立을 自由化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특정 부류의 대학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필요로 하는 종류의 대학을 需要에 適切하게 供給하자는 것이다. 즉, 우리는 흔히 대학이라던 4년제 대학만을 머리에 떠올리며, 대학의 문호 개방이니 대학 설립의 자유화니 하면 곧 4년제 대학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4년제 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가장 많이 필요한 것도 시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의 문호 개방이나 대학 설립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것이 곧 4년제 대학만을 고집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개방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수를 대폭 늘리는 데 주안을 두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大學設立의 自由化에 대한 찬성론을 전개하는 필자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학의 설립은 대학설치기준령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대학설립인가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審査 基準에 합당하면 認可해 주어야 한다. 이때 설립 심사 기준으로는 대학종류별·지역별·인력수급조

결상의 균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모든 대학 설립 희망자들이 서울에만 설립을 희망한다거나, 4년제 대학만을 선호하거나, 인문 계열 학과만을 선호한다면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定員을 統制할 목적으로 大學設立을 抑制하기 위한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기본 원칙으로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기초 학력과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면 누구든지 전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어야 하며, 대학의 수가 충분해야 한다.

둘째, 대학의 설립에 있어서 國家的으로 필요한 人力을 계획적으로 養成하고, 지역별·종류별·계열별로 사학 재단이 설립을 기피하는 경우는 國·公立으로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私立大學은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해 주어야 한다. 이때 정치적·종교적 이유나 어떤 특정 집단의 이해 관계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大學經營의 自律性이 전제되고 보장되지 않으면 대학 설립의 자유화는 의미가 없다. 대학 설립의 자유화란 대학 창립의 자유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학과 신설이나 증원, 교과과정 운영, 신입생 선발 등에 있어서의 완전한 자율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원칙적으로 대학 설립의 자유화란 승인이나 인가제가 아니라 申告制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도 밝혔듯이 지역별·종류별·학과별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대학설치기준령과 대학 설립 인가 조건만 충족시키면 거의 자유롭게 누구든지 대학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4. 結

대학 설립의 자유화는 기본적인 수학 능력만 갖추었다면 모든 대학 진학 희망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大學의 收容能力을 늘리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대학교육이 낭비가 아니며, 대학교육은 교양과 인격을 함양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질과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대학교육이 더이상 소수 엘리트 교육 기관이 아니라 대중 교육 기관이며,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따라서 大學敎育은 그 문호를 완전히 開放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대학은 성격상 공공성·책무성·수월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질적 관리에 소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학 설립의 자격 요건은 엄격해야 하며 철저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기구를 통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사 기구는 자격 요건 구비 여부와 심사 기준에의 적합성 판정만 할 뿐이며 대학 설치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떤 단서 조항도 붙여서는 안 된다. 예컨대, 대학은 기본 시설 요건만 갖추면 학과 신설과 학과 정원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교과과정을 임의로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 수급 조정이 꼭 필요한 사범대학이나 의과대학은 정원 조정에 있어서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대학 설립의 자유화는 예상되는 부작용도 전혀 없지는 않다. 즉, 자유 경쟁의 원칙이 적용될 경우 부실 대학은 자연스럽게 태워질 것이며, 앞으로 가속화될 인구 감소 현상은 대학 지원율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양적 팽창만 해오던 대학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른바 고등 실업자의 양산이다. 그러나 이는 國家的 차원에서의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 즉, 인력 수요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중등 교육 과정에서의 건전한 직업관 함양과 진로 교육의 강화, 기업체의 임금 격차 해소, 오도된 교육열을 바로 잡기 위한 사회 의식 개혁 운동의 확산 등등이 필요하다. *